

연구총서 2002-29

•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이론적 모델과 전문가 인식 조사

박 영 호
김 규 루
서 재 진
임 강 택
조 민 영
허 문 영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제 1 부 이론적 모델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구성	3
II. 이론적 통일 유형	8
1. 통일 유형	8
2. 유형별 실현 가능성	14
3. 영향 요인	16

제 2 부 전문가 인식 조사

III. 전문가 인식 조사	21
1. 조사 목적	21
2. 조사 내용과 방법	22
IV. 조사결과 분석	25
1. 북한의 경제관련 조치의 성격과 영향	25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	34
3. 북한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39
4. 북한 정치체제 변화 유발사태 발생 가능성과 시기	50
5. 통일 가능 시기, 통일 방식과 과제	54
6. 한반도 통일과 국제 환경	62
7. 통일기반 조성 과제와 통일에 대한 견해	67
참고문헌	71
<부 록 1>	72
<부 록 2>	85

- 표차례 -

<표 II-1> 통일 유형	13
<표 II-2> 유형별 실현 가능성	16
<표 II-3>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
<표 IV-1> 최근 경제관련 조치의 성격	26
<표 IV-2> 경제회복 노력의 성공 가능성	28
<표 IV-3> 향후 5년 이내 초기 자본주의양식 도입·정착 가능성	29
<표 IV-4>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자본주의 도입으로서의 의미	31
<표 IV-5>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	32
<표 IV-6>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치체제변화 촉발 시기	34
<표 IV-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	36
<표 IV-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공산주의자’로서의 리더십	37
<표 IV-9>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향력	39
<표 IV-10> 개방체제로의 변화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비중	40
<표 IV-10-1> 이념 및 정치분야 요인의 비중	42
<표 IV-10-2> 경제분야 요인의 비중	44
<표 IV-10-3> 사회분야 요인의 비중	45
<표 IV-10-4> 군사분야 요인의 비중	47
<표 IV-10-5> 대외관계분야 요인의 비중	49
<표 IV-10-6> 남북관계분야 요인의 비중	50
<표 IV-11> 향후 5년 이내 정치체제 변화 유발사태 발생 가능성	52
<표 IV-12> 정치체제 변화 유발 사태 발생 가능 시기	53
<표 IV-13> 통일 가능 시기	55
<표 IV-14> 통일 방식	57
<표 IV-15> 통일을 위한 선행 조건	58
<표 IV-16> 통일이 어려울 경우의 이유	60
<표 IV-17> 평화 통일을 위한 역점 과제	61
<표 IV-18> 한반도 통일에 가장 우호적인 주변국가	63
<표 IV-19> 통일을 위해 협력을 구해야할 국가	64
<표 IV-20> 북한의 대미·일관계 개선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66
<표 IV-21> 향후 5년의 동북아정세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67
<표 IV-2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69
<표 IV-23> 통일에 대한 견해	70

제 1 부
이론적 모델

I. 서 론

1. 연구 목적

탈냉전의 시대가 10년 이상을 지나면서 한반도 정세도 여러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한이나 북한 모두 국내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또 국제환경의 도전에 각자의 방식으로 응전해 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오랜 기간의 군사권위주의정권에서 벗어나 두 차례의 순수 민간정부를 거치면서 시민(civil)사회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그 역할과 비중이 커졌으며 또한 점차 성숙해 가는 정치발전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북 정책도 이와 같은 국내정치 발전의 양상이 투영되는 진화를 하였다. 냉전 시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양적, 질적으로 크게 증대하였고,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표출되었다. 정보화의 진행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에서 여러 가지의 견해가 제시되고 활발한 토론의 마당이 펼쳐졌다.

북한의 경우, 세계적 수준에서의 사회주의진영 해체라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정권을 수립하고 그 이후 45년 이상을 권력의 정상에 군림하였던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한은 또한 경제적 쇠퇴현상을 경험하였다. 북한은 유일 지배체제의 '계승자' 김정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강성대국' 건설과 '선군정치'의 기치 하에 체제안정과 경제적 난국의 극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를 강화할 뿐 아니라, 일련의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사이 남북관계는 교착상태 속에서도 경제교역을 중심으로 꾸준

2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한 진화추세를 보여오다가,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 목표로 세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2000년 6월 13~15일간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이후 크고 작은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으나 남북장관급회담을 필두로 여러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는 당국간 회담은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인적 교류가 급증하였으며, 경제교류와 협력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으로 남북한이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한반도문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개입되어 있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제제기가 등장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미국을 통해 난국을 풀어나가려는 전략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실리를 남북관계로부터 찾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남북관계와 한미동맹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적 모습을 바라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직면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21세기 초반에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고와 인식의 지평을 넓힐 것을 요구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 적합한 차원에서 통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통일과정의 준비에서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는, 우리가 지향하는 형태의 통일과정과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정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적실성이 있는 통일의 과정을 설계(projection)하고, 그에 기초하여 착실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착안된 본 연구는 통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올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 동안 통일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남북한 각각의 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국제정세의 변화 등 최근의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다. 이러한 연구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통일의 이론적 가능형태는 물론 우리의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통일의 과정, 그리고 남북관계, 특히 북한체제에 내포된 불가측성과 가변성을 고려한 통일의 과정 등 종합적인 통일과정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는 중·장기적인 국가전략과 정책 방향의 창출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구성

본 연구는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분석하고, 그러한 측정·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적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통일 예측 모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 하는 중·장기 연구의 기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연구원에서는 1990년대 상반기에 거시적 차원의 「민족통일대계」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골격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를 보완·발전시키면서 통일문제 연구의 전문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또한 북한 연구의 각론화는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문헌을 해제하는 기초 연구작업도 꾸준히 수행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연계하여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각론적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대북 및 통일정책과 관련한 실증적 연구의 일환으로써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와 미·일·중·러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조사도 수행하였다.¹⁾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 바로 알기’가 상징하는 것

4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처럼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학계에서는 ‘북한학’과 ‘통일학(또는 통일정책학)’에 대한 학문적 성과가 누적되고 있다.²⁾ 대북 및 통일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담당자들에게도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가 수요가 늘어났다.

이러한 학문적, 정책적 수요의 증대와 그 동안의 기초 작업 위에서 이제는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연구가 보다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심화·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 연구도 더욱 세련화되고 각론적이며 과학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정책적 요구는 통일정책 연구가 종합 연구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본질적으로 중·장기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소 2개년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 중·장기 통일정책 연구작업으로서 우선 1차 연도의 작업이다. 1차년도 작업의 大주제는 ‘통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 이 연구과제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큰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토대 위에서 2차 연도에는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들을 설정하고 측정하며, 실제적인 모델의 구축을 통하여 통일을 예측 가능한 과제로 실제화시키는 통일 예측모형을 만들려고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하나의 大주제 아래 세 개의 小주제 연구

1)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연구원 편, 『통일연구원 10년사』(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23~49 참조.

2) ‘북한학’과 ‘통일학’을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대학(원)에는 북한학과와 통일정책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북한학’과 ‘통일학’은 어느 한 학문영역에 속할 수 없는 학제간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문제나 통일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서술·설명·예측하며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실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팀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첫째, 제 1 연구팀은 우선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통일의 유형을 간략히 점검할 것이다. 통일 또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한 예측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한정치상황변화 예측연구」(국토통일원, 1989), 「미리보는 코리아 2000」(최평길, 1993), 「남북한 통일시나리오」(삼성경제연구소, 1996),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민족통일연구원, 1996) 등이 있다. 이 밖에 여러 연구들이 있으나, 앞에 지적한 연구들이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과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고, 보다 체계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는 예측 가능했다기보다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³⁾ 또한 과학적 기법을 응용한 연구들도 가정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 유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전문가들을 초청한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통일 유형 중 ‘현실 가능한’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작업을 실시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현재와 중기적 미래를 반영하여 2차 연도의 통일 예측 모형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 예컨대, 최평길 교수는 한반도문제에 관해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 각 10명씩 총 5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Delphi) 기법을 적용, 북한 변화 및 통일문제를 예측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8~2000년 기간 중 북한에서는 김정일 실각, 체제변화, 군부쿠데타, 사회주의 몰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한에서는 주한미군 완전철수, 통일헌법과 남북 선거법 개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서 “2000년에는 남한이 붕괴된 북한을 떠맡는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였다. 최평길, “남북한 관계발전 시나리오 2000 - 21세기를 준비하는 남북한의 통합 전망,” 한국정치학회 편,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제4회 한국정치학회 세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1994. 7. 19~20), pp. 886~887.

6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둘째, 제2 연구팀은 통일이 평화적이며 단계적인 과정을 밟는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정책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이와 같은 점진적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동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상정하며, 이러한 인식이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에 반영되었다.

점진적 시나리오에 따른 연구는, 점진적 통일 상황 및 통일방안의 개념규정을 토대로 통일과정에서의 주변환경과 북한의 변화상황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 통일상황에 상응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의 정책방향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점진적 통일상황 및 통일방안의 개념규정분야에서는 점진적 통일상황의 이해와 남북한 통일방안의 분석 및 비교가 이루어 질 것이다.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주변환경분야의 경우 우선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며,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남북연합 진입 이전과 남북연합기가 전·후반기로 나뉘어 고찰될 것이다. 이어 점진적 통일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중 하나인 국내 및 국제정세분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분야별 추진방안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가 각각 검토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진적 통일상황에 상응하는 예측 및 분석은 올바른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셋째, 제 3 연구팀은 통일 상황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과 형식으로 도래할 수 있음을 가정한 통일 시나리오와 정책 추진방안을 연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만약 북한에서의 변화 모습이 예기치 않은 형태로 나타날 경우, 그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를 이론적인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변화의 시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일 상황을 추정하는 데 관건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북한의 변화 모습이 어떠한 남북관계의 상황 아래서 나타나는가의 문제이다. 남북관계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정책의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이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개념은 통일상황 시나리오와 통일과정에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으로는 통일문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적으로는 우리의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추진할 보다 본격적인 통일 예측 모형 연구의 기초 작업을 다진다.

II. 이론적 통일 유형

1. 통일 유형

가. 경험 사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통일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대세계사에서 같은 민족이 분단 국가로 나뉘어 살다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이룬 사례는 베트남, 독일, 예멘이 대표적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베트남의 경우, 프랑스와의 8년간의 독립전쟁을 종결하는 1954년 7월의 휴전협정으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후 남북베트남간의 내전이 있었으며, 베트남과 북베트남이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고 통일이 이루어졌다. 즉 무력통일의 사례이다. 사회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달성한 베트남은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면서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예멘의 경우, 1960년대에 남북예멘에 각각 근대 국가가 수립되어 분단 상태가 지속되다가 주변국들의 중재와 남북예멘 당사자간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1990년 5월 22일 통일을 선포하였다. 즉 평화적 협상에 의해서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남북예멘간에 통일예멘의 권력구조와 국정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더욱이 각각 군대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1994년 5월 양측간에 전면전이 발생하고, 같은 해 7월 7일 북예멘군이 남예멘의 수도이던 아덴을 점령함으로써 재통일을 이루었다. 예멘 통일은 서로간의 차이와 존재하던 갈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합의통일이 결국에

는 무력통일로 종결된 사례이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의 헌법인 「독일연방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통합된 흡수 형식의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회주의체제 동독에서는 우여곡절은 겪었으나 국민들과 공산당 정권 이후의 신정권 지도자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장경제체제와 정치적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과감하게 선택하였다. 또한 서독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분단의 극복이 현실의 바탕 위에서 출발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동독을 공존과 협상의 대상인 국가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였으며, 통일은 이러한 정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었다.

이상과 같이 현대세계사의 경험적 사례로부터 우리는 통일의 유형을 전쟁형, 합의형, 흡수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예멘의 경우 결국 내전을 통한 무력통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합의형 통일의 성공적인 실현 조건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이론적 유형

이론적 차원에서 통일의 유형을 구분하려 할 경우, 어떠한 가정과 조건, 어떠한 변수들을 설정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연구는,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소가 기업 경영 예측과 대비를 위해 개발한 「SRI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여 통일요인을 좁혀 가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통일과정과 통일형태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2개의 변수를 추출하고, 그 두 변수를 기본 축으로 하여 합의형, 유도형, 자멸형, 충돌형 등 4개의 통일유형을 제시하였다.⁴⁾ 기본 축을 이루는 두 변수는 북한의

4) 삼성경제연구소 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리더십과 한미의 대북정책이다. 남북한 및 미국 3자간의 관계가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의 대북정책을 동일 선상에서 보았다.

4개의 통일유형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 번째 유형인 합의형 통일은 북한의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대북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가능한 유형으로 본다. 두 번째 유형인 유도형 통일은 연성의 북한 리더십과 한미의 대북 지원정책의 결합함으로써 나타난다. 세 번째 유형인 자멸형 통일은 연성의 북한 리더십과 한미의 대북 봉쇄정책이 결부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인 충돌형 통일은 북한의 리더십이 강성이고, 한미가 대북 봉쇄정책을 추진할 경우 나타나는데 결국 전쟁의 결과로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본다.⁵⁾

이와 같은 이론적 통일유형 분류는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선택 준거와 상황 변수, 매개 변수 등의 변화가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를 초청한 집중 워크숍에서 발제된 논의를 중심으로 이론적 유형을 분류해본다. 본 연구과정에서 통일연구원 외부 전문가로서 서주석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이기동 박사(통일정책연구소), 천해성 과장(통일원)이 2002년 10월 31일 통일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작업 팀과의 집중 워크숍에서 발제하였다.⁶⁾ 한편, 2002년 8월에 미국의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일단의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로

1996), pp. 7~22 참조.

5) 위의 책, pp. 20~21.

6) 동 워크숍에서 같은 주제에 대하여 서주석 박사는 “통일 상황 시나리오,” 이기동 박사는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천해성 과장은 “통일 상황 시나리오 검토”란 제목으로 각각 발제하였다. 동 발제문들은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워크숍 참여자에게 제공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요약 기술에서는 특정하게 인용 각주를 달지 않는다.

구성된 연구그룹의 연구결과인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였는데, 동 연구보고서에서도 한반도의 통일 유형을 구분하였다.⁷⁾ 유형 분류에 따른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전문가들의 견해와 비교해보기 위하여 <표>로 함께 정리하였다.

통일의 유형과 관련, 서주석 박사는 평화적 합의통일, 흡수통일, 전쟁에 의한 통일 등 세 유형을 상정하였다. 합의통일은 남북한이 내부의 총의로써 통일을 결정하며, 기존의 남북 양 체제를 유지(연방제)하거나, 또는 융합(완전 통일)하는 형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흡수통일은 북한에서 국민투표, 선거 등의 방법으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쟁에 의한 통일은 무력충돌로 군사분계선이 완전하게 훼손될 경우에 가능한 유형으로 보았다.

이기동 박사는 통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통일의 양상(의도적 또는 우발적)과 통일의 방식(흡수 또는 공존)이라는 두 변수를 준거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일의 양상과 관련, 의도성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획한 의도와 프로그램에 따라 통일이 달성된 것을 의미하고, 우발성은 내부나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영향을 받아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변수의 결합을 통하여 이기동 박사는 통일유형을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제1유형인 의도적 흡수형은 베트남식 통일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무력통일의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제2유형인 의도적 공존형은 예멘의 1차 통일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합의에 의한 통일을 말한다. 제3유형은 우발적

7) CSIS Working Group Report,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Washington, D.C.: CSIS, August 2002), pp. 3~9. 이 부분에 대한 요약은 <부록 2> 참조.

흡수형으로서 독일식 통일을 이 유형으로 보았다. 그리고 제4유형은 우발적 공존형으로서 아직 역사적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친해성 과장은 구체적 상황과 요인, 변수에 따라 통일 유형이 세분화되거나 또는 몇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나친 세분화는 형식논리에 빠질 수 있고 또 현실적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도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기본 유형으로서 합의형, 흡수형, 전쟁형의 3가지 통일 유형을 제시하였다.

CSIS 보고서도 한반도 통일의 유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평화적 통합형(unification by peaceful integration), 북한체제의 실패로 인한 흡수형(unification by default), 그리고 전쟁형(unification by war)의 세 가지 유형으로 귀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⁸⁾

위크숍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통일의 유형을 다양하게 상정할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상에서 요약·기술된 바와 같이 합의형, 흡수형, 전쟁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연구가 분류한 유도형과 자멸형의 통일도 흡수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각 유형의 특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합의형 통일은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과 점진적인 통일을 상정하는 경우이다. 남북이 평화공존 하는 가운데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실상의 공동체를 형성한 뒤에 합의에 의한 통일을 성취하는 형태이다. 통일비용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 있고 통합과정에서의 부작용과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유형이다. 합의형 통일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상정하고 있다.

8) 위의 책, p. 3.

둘째, 흡수형 통일은 동서독의 사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과거 동독이 서독의 체제에 흡수되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북한이 남한체제에 흡수됨으로써 통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보는 데 공통점이 있다. 이 유형의 통일 방식에서도 북한체제의 일정한 변화가 전제된다.

셋째, 전쟁형 통일은 남북한이 무력충돌의 발생으로 어느 일방이 타방에 점령당함으로써 통일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전쟁형의 통일은 이론상의 한 유형으로 상징할 수 있으나, 우리의 통일 유형으로서 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배제되어야 할 통일의 유형이다.

<표 II-1> 통일 유형

서 주 석	이 기 동	천 해 성	C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형 (연방·완전) ·흡수형 ·전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 흡수형 (전쟁형) ·의도적 공존형 (합의형) ·우발적 흡수형 (흡수형) ·우발적 공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형 ·흡수형 ·전쟁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적 통합형 (soft landing) ·체제붕괴/흡수형 (hard landing) ·전쟁형

2. 유형별 실현 가능성

각 유형별 또는 유형간에도 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시간적 조건, 상황적 조건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또한 각 유형별로 단기, 중기, 장기의 시간 변수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남북한 통일시나리오』(1996)는 4가지의 통일 유형을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①유도형, ②자멸형, ③합의형, ④충돌형의 순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유도형과 자멸형의 통일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합의형과 충돌형의 통일 방식은 실현가능성의 측면보다는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만 평가하였다. 특히 실현가능성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된 통일문제 전문가 20명의 응답은 유도형이 50%, 자멸형이 45%로서, 95%의 압도적인 다수가 ‘흡수형’ 통일의 가능성을 높게 보았다.⁹⁾ 그리고 만약에 각 유형에 따른 통일이 진행된다면, 그 소요 시간은 합의형은 20년 이상, 유도형은 5~15년 이내, 자멸형은 3~10년 이내, 충돌형은 3~5년 이내 정도로 추정하였다.¹⁰⁾

본 연구의 집중 워크숍에서 토론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합의형 통일은 남북간의 공존과 통합의 과정이 없이는 실현이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합의형 통일은 가장 이상적인 통일의 유형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면서 체제전환과 민주화의 달성을 전제로 할 경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통일의 실현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체제의 구축

9) 삼성경제연구소 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pp. 40~47.

10) 위의 책, p. 45 <표10> 참조.

이 선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주석 박사는 남북한의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연방제’ 통일을 상정할 경우 그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나, 남북간 현재의 상호 적대의식을 고려한다면 일정한 기간의 소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¹¹⁾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모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흡수형의 통일은 불안정성이 높고 대처하기도 어렵지만 다른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위에서 인용된 1990년대 중반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변화된 상황에서도 세 가지의 통일유형 중에서 그 실현 가능성의 상대적 비중이 여전한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성, 북한체제의 변화 등에 따라 그 가능성 또한 변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형 통일은 전반적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히려 통일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전쟁 대비계획 차원에서 준비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워크숍 참여 전문가들은 전쟁형 통일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았다. CSIS 보고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았으나, 동 보고서는 군사적 충돌 형태의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군사적 역할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¹²⁾

11) 서주석 박사는 단·중·장기별로 볼 때 하나의 유형도 각기 다른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수치는 염두 판단에 의존).

- ①단기(향후 5년 이내) : 합의통일 0%, 흡수통일 5%, 전쟁통일 10%
- ②중기(향후 5~15년) : 합의통일(연방) 20%, 합의통일(완전) 10%, 흡수통일 30%, 전쟁통일 5%
- ③장기(향후 15~30년) : 합의통일(연방) 40%, 합의통일(완전) 30%, 흡수통일 40%, 전쟁통일 0%

12) CSIS Working Group Report,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Washington, D.C.: CSIS, August 2002), pp. 8~9.

<표 II-2> 유형별 실현 가능성

서주석	·합의형- 장기적으로 가능성 高 ·흡수형-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高 ·전쟁형-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가능성 있으나 미약함 (단·중·장기적인 시기별로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임)
이기동	·의도적 흡수형 - 低 ·의도적 공존형 - 低 ·우발적 흡수형 - 高 ·우발적 공존형 - 高
천해성	·합의형 - 低 ·흡수형 - 高 ·전쟁형 - 고려대상이 아님
CSIS	·평화적 통합형 - 매우 장기적인 공존과 통합 없이는 실현불가능 ·체제붕괴형(흡수형) - 정확한 예상은 불가능하지만 가능성 높음 ·전쟁형 -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으로서는 군사적 우발 사고에 가장 많은 대비를 하고 있음

3. 영향 요인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내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의 하위 수준에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대외관계 분야 등에서의 구체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요인으로는 지도자의 통일 의지와 리더십,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과 국민의 의지, 정치세력의 동향과 정치 역학, 통일추진 역량, 경제·사회적 통일유지(부담) 능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북한 요인에는 지도자의 통일 의지와 리더십, 김정일 체제의 존속 여부, 이념·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의 능력, 체제 개혁·개방 세

력의 확대 가능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과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 중·러의 대북 지원과 북한 사회의 전반적 국제화 정도, 통일 열망의 현실화 정도 및 대남 인식 등이 있다.

국제 요인으로는 한·미 동맹의 지속성,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과 대북정책,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북한 체제 지원, 일본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중간 세력균형, 동북아 역학구조 등을 지적할 수 있다.¹³⁾

특히 통일 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합의형 통일에서 북한체제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에 성공하여, 경제안정과 사회 전반의 안정적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 한·미를 비롯한 주변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변화 환경을 조성·지원하는지의 여부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흡수형 통일에 있어서는 북한정권의 성격, 북한 체제의 내구력(군부 동향), 엘리트와 주민의 의식(통일/대남) 등 북한 내부 변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통일 추진에 대한 남한측의 의지와 역량,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상황관리(외교) 능력도 중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통일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 중에서 국제 변수가 상당히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집중 워크숍에서는, 실제로는 국제 요인보다 남북한 내부의 상황, 즉 남북한의 통일 의지와 여건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관리 능력과 함께 북한의 지도부 및 주민의 인식과 의도가 주요 변수로 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서독 통일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은 탈냉전의 기류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체제붕괴의 촉

13) 서주석 박사의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천해성 과장, 이기동 박사의 제시 사항과 토론에서 제안된 것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발과 진행, 통일 추진과정에서 동독 주민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시위, 선거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대외에 알려짐으로써 서독의 대대외적 조치들이 순조롭게 진행된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 II-3>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주석	국내·북한·국제적 차원	국제요인보다 남북한의 통일의지와 여건이 가장 중요
이기동		외적인 환경보다는 북한의 내부적 상황이 더욱 중요
전해성	국내·북한·국제적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의형 -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 및 변화 추진 가능성, 주변국의 지속적인 변화 유도 및 지원 가능성 ·흡수형 - 국제변수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관리 능력과 함께 북한 지도부와 주민의 인식과 의도가 중요
C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적 통합형 - 남북간 경제교류의 중요성 강조. 미국은 남북한간 중개인 역할,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해소 등의 중요한 역할 담당 ·체제붕괴/흡수형 - 북한 내 '대중 소요 또는 엘리트 개혁세력'이 촉발 요인. 미국의 역할은 북한 재건을 위한 개입, 한반도 지역 국가들간의 조율 ·전쟁형 - 중국 변수가 가장 심각. 미군은 가장 주요한 역할 맡게 될 것임. 때문에 미군 주둔에 대해 반감도 가장 덜 할 것으로 예상

제 2 부
전문가 인식 조사

Ⅲ. 전문가 인식 조사

1. 조사 목적

이론적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몇 가지의 통일 유형을 상정할 수 있다. 각 통일 유형에 따라 통일과정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양상은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유형 아래서도 비슷한 사태 전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론적 모델이 역사적 경험과 완전히 동떨어져 구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은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귀납적인 방법으로 정립되기도 한다. 경험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형식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 유형에 대한 이론적 모델 논의를 향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한반도 상황에 현실 적합한 통일 예측 모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한 상황과 통일 상황 전개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두 해를 제외하고 통일연구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여론조사는 당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는 조사시점과 조사를 즈음한 시점에서의 남북관계 상황 등으로부터의 영향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탐구하며,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세련된 통일 예측 모

형을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상황 변화와 통일 상황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분별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내용과 방법

가. 조사 내용

본 전문가 인식 조사는 일반인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였다. 또한 향후 추진할 모형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설문 내용을 가급적 자세하게 만들었다. 남북관계, 북한체제,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반영되어 향후 중요 변수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으며, 특히 북한 상황 변화와 및 통일 상황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은 비중을 상대화할 수 있도록 질문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본 전문가 인식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북한체제의 현실에 대한 평가와 향후 북한의 변화와 관련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부분 관련 조치의 성격과 영향(문1~문6),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문7~문9), 체제 변화 영향 요인과 그 비중(문10, 문10-1~6), 체제변화 유발 사태 발생 가능성의 정도(문11)와 시기(문12)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통일 상황 전개와 관련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통일 예상 시기(문14), 통일의 진행 방식(문15), 통일의

선행 조건(문16), 통일이 어려울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 그 이유(문17),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역점 과제(문18), 한반도통일과 주변국(문19~문20), 통일기반 조성 과제(문21), 통일에 대한 인식(문22), 국제정세의 영향(문23),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의 영향(문24) 등으로 이루어졌다.

나. 조사 방법

설문지의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확정된 설문지를 2002년 10월에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 총 76명에게 직접 또는 우편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설문대상자의 선정은 본 조사가 모형 설계를 위한 기본적 방향성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접근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은 대학(원) 북한학과 교수진, 통일교육원 교수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문제 관련 연구진, 통일부 관련 업무 담당자, 통일연구원 연구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69명이 응답하여, 90.8%의 응답률을 보였다.¹⁴⁾

다. 자료 처리 및 분석

회수된 조사 자료는 응답내용의 충실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응답지가 충실하게 응답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통계프로그램(SPSS ver 11.0 for Windows)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본 전문가 인식조사는

14) 최종적으로 응답한 69명은 대학(원)북한학과 교수진 17명, 통일교육원 교수진 9명, 한국국방연구원 북한문제 관련 연구진 9명, 통일부 정책실 무자 1명, 통일연구원 연구진 33명 등이다.

24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 방안

향후 통일 예측 모형 설계를 위하여 중요 변수들을 판별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기본빈도(frequency)를 구하고, 그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IV. 조사결과 분석

1. 북한의 경제관련 조치의 성격과 영향

북한체제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경제회복이다. 경제정책의 변화가 타 부분의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론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 북한의 경제부문에서의 변화가 북한체제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에 북한이 발표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성격, 성공 가능성과 과급효과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았다.

가. 최근 경제관련 조치의 성격

“북한이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조치를 취하고 신의주지역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한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응답자(44.9%)가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틀 속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31.9%)은 ‘북한은 불가피하게 경제개방과 개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조치들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대답으로, 이상의 두 가지를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대부분(76.8%)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이며 전술적인 조치’라는 응답이 10.1%를 차지했으며,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응답이 7.2%, 그리고 ‘북한이 의식적으로 중국식 개방·개혁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비교적 소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최근의 조치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 관련 최근 조치를 북한이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속하게 변화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개혁·개방의 성격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개혁·개방 조치가 갖는 성격을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시 방편적이며 전술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는 전문가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적게 나타났으며,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최근의 조치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대답한 전문가들과 임시 방편적이며 전술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거나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Ⅳ-1> 최근경제관련조치의성격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경제난국 극복 위한 임시방편·전술적 조치	7	10.1	10.1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 정상화 조치	5	7.2	7.2
북한사회주의 틀 속에서의 경제정책 변화	31	44.9	44.9
중국식 개방·개혁정책 진행	4	5.8	5.8
경제개혁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임	22	31.9	31.9
합 계	69	100.0	100.0

나. 경제회복 노력의 성공 가능성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 특구 계획 등 북한 당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은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89.9%)가 ‘남한의 경제지원과 남북협력관계의 증진, 대미관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없이 ‘남한의 지원과 남북협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8%에 불과한 사실과 대비시키면,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북한의 경제회복 노력의 성과를 가르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답변과 ‘독자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우나,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필수조건은 아니다’라는 답변이 각각 1.4%와 2.9%에 불과한 사실은, 위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금과 기술이 필요한데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노력만으로는 북한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남한 자체의 경제적인 한계와 함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영향력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 전문가들의 이러한 의식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반영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들의 인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대목이라고 하겠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의 지원으로도 북한이 경제회복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중국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이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북·중관계가 과거의 패턴을 뛰어 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표Ⅳ-2> 경제회복 노력의 성공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남한지원, 남북협력, 대미관계개선이 전제	62	89.9	89.9
남한지원, 남북협력을 통해서 성공 가능	4	5.8	5.8
중국지원만으로도 성공 가능	1	1.4	1.4
독자성공은 어려우나, 외부지원이 필수조건은 아님	2	2.9	2.9
합 계	69	100.0	100.0

다. 향후 5년 이내 초기 자본주의양식 도입·정착 가능성

“향후 5년 이내 북한은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생필품, 소비품 가격의 시장 가격으로의 전환과 같은 초기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작동 양식을 도입하여 정착시킬 것이다.” 라는 예측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50.7%)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다소 높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0.3%이고, 매우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5년 이내에 북한이 자본주의양식을 도입하거나 이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84%)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가능성이 다소 낮다’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8.7%와 7.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처음의 질문에서 최근의 조치가 갖는 성격이 본질적인 변화로 보느냐고 물었을 때는 다소 보수적으로 답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현재에는 북한에서 제한

된 범위 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이 향후 5년 이내에 초기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양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다소 높거나 매우 높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33.3%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조치를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이라고 판단하는 응답자가 5.8%에 불과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데 비하면,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조치가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이내에 북미관계가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V-3> 향후 5년 이내 초기 자본주의양식 도입·정착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높음	9	13.0	13.0
다소 높음	14	20.3	20.3
조금 있음	35	50.7	50.7
다소 낮음	6	8.7	8.7
매우 낮음	5	7.2	7.2
합	계	69	100.0
		100.0	100.0

라.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자본주의 도입으로서의 의미

“북한의 7·1경제 관련 조치와 신의주 행정특별구 지정 등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들을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방식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49.3%)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밝힌 데 반해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33.3%)가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자(7.2%)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0.1%)를 동의와 반대 의사로 나눌 경우 동의하는 쪽은 56.5%이고 동의하지 않는 쪽은 43.4%에 달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경제 관련 조치들이 사실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수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질문에서 전문가들이 5년 이내에 북한이 초기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양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조치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체제의 틀 속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평가(44.9%)하거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이며 전술적인 조치’라는 응답이 10.1%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응답자들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상반된 응답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앞의 질문에서 자본주의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북한의 최근 조치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상에 대한 평가를 한 것에 반해, 이 질문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역시 앞 질문에서 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막연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문제 연구자들은 현재에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과 핵 문제가 완화되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대외관계도 지금보다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4>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자본주의 도입으로서의 의미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동의함	5	7.2	7.2
어느 정도 동의함	34	49.3	49.3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23	33.3	33.3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10.1	10.1
합	69	100.0	100.0

마.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정치분야와 개방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개방(개혁) 조치이며 정치적으로도 체제의 유연성을 가져오고 개방으로의 정책 선택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응답이 44.9%에 달하였으며,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응답은 23.2%,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8.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경제관련 조치들이 정치분야와 개방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부분(76.8%)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하거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15.9%와 7.2%를 차지하여, 북한의 경제관련 조치들이 정치분야와 개방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2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에서 경제관련 조치들이 정치분야의 변화를 촉진하는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김정일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체제가 경직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에서의 변화가 정치분야 정책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경제분야의 작동 시스템의 변화가 정치분야의 정책 선택에 미치게 될 영향력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영향력이 전파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와 ‘다소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전체에서 6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의 경제 관련 조치들이 북한 정치와 개방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V-5>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높음	6	8.7	8.7
다소 높음	16	23.2	23.2
조금 있음	31	44.9	44.9
다소 낮음	11	15.9	15.9
매우 낮음	5	7.2	7.2
합	69	100.0	100.0

바.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치체제 변화 촉발 시기

최근의 경제개선조치와 경제정책에서의 변화가 정치체제의 유연성과 개방정책의 촉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부문의 변화 욕구를 분출시킴으로 인해서 정치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까지 진전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였다.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주민의 사고 체계에 변화를 가져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욕구 불만을 표출시키게 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정치체제의 변화 현상이 촉발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향후 몇 년 내에 보다 적실성(適實性) 있는 주장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것이다.

‘5년 이후 10년 이내’일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42%)하였으며, 다음으로 5년 늦은 ‘10년 이후 15년 이내’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이 26.1%를 차지하였고, 오히려 5년 이른 ‘3년 이후 5년 이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소수 의견으로 ‘15년 이후’가 10.1%, ‘3년 이내’가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68.1%)의 전문가가 북한이 최근과 같은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5년에서 15년 이내”에 사회분야에서 주민들의 변화 욕구를 분출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체제의 변화가 촉발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최근의 경제정책 변화가 정치분야에서의 유연성 제고와 개방정책의 촉진 가능성에 대해서 대부분(68%)의 응답자가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보통수준이나 그 이하로 평가한 것과 비교할 때는 보다 본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향후 5년 이내에 초기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작동 양식을 도

입할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조금 있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전망은 상당히 낙관적인 데 반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6>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정치체제변화 촉발 시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3년 이내	2	2.9	2.9
3년~5년이내	13	18.8	18.8
5년~10년 이내	29	42.0	42.0
10년~15년 이내	18	26.1	26.1
15년 이후	7	10.1	10.1
합	69	100.0	100.0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

옛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국가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였다. 또한 분단국의 통일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핵심적 변수이다. 통일 유형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에서도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이 통일 상황의 전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로 지적되었다.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

최근의 경제 관련 조치는 물론, 1998년 김정일 체제의 본격적인 출범 이후 추진된 경제정책과 관련 조치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이러한 조치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1998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재추대 이후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과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도적인 개방·개혁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응답자(69.5%)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다. ‘상당히 그렇다’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59.4%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도 1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에 김정일 위원장의 의도적인 개혁·개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전문가는 30.4%에 불과하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경우가 24.6%이고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5.8%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진행되어 온 경제정책에서의 변화가 북한 당국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 하에서 추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임기응변적인 전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의 정책 및 체제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 북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개혁·개방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북한의 체제가 유연성이 있으며, 지도자인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김정일 위원장의 ‘개방적인 이미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7〉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개방 의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그렇다	7	10.1	10.1
상당히 그렇다	41	59.4	59.4
별로 그렇지 않다	17	24.6	24.6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0.0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4	5.8	5.8
합	69	100.0	100.0

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공산주의자’로서의 리더십

1970년대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로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 북한을 이끌어 온 김정일 위원장이 과연 김일성 주석의 영향을 벗어나고, 나아가 냉전기 자신의 성과와 과오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은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개혁공산주의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55.1%에 달하였으며, ‘매우 동의한다’는 7.2%로서 상당수의 응답자(62.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다만 앞의 질문에서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도적 개혁·개방의 반영으로 간주하는 응답(69.5%)이나, 향후 5년 이내 자본주의양식 도입 및 정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84%)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반면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20.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3%,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가 4.3%로서 37.6%의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개혁공산주의자’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이 북한의 자본주의 정

착가능성에 대해 16.5%의 부정적 응답을 보여준 것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제정책적 변화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분석과 기대를 갖고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중국에서 모택동 사망이후 실용주의자 등소평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북한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주도하에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기를 전문가들은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서해교전(2002.6.29)과 북한 핵문제 제기(10.17)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개혁적 인물로 규정하는 데에 대해 다소 주저케 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개혁·개방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표 IV-8>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공산주의자'로서의 리더십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5	7.2	7.2
어느 정도 동의한다	38	55.1	55.1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14	20.3	20.3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9	13.0	13.0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3	4.3	4.3
합 계	69	100.0	100.0

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향력

김정일 체제가 최근에 취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김정일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향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자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고권력자로서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한다’가 47.8%, ‘매우 동의한다’가 20.3%로서 전문가 가운데 68.1%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존시에 권력누수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24.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4.3%,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가 2.9%로서 김정일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31.8%에 달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 안정성과 연관된 이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68.1%)은, 앞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방·개혁의지에 대한 질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적 리더십 관련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각각 68.6%와 62.3%)과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성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권 장악력이 공고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영향력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매우 동의한다’가 20%를 넘는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 정권장악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북한전문가들이 군부의 영향력 증대 또는 당·정 갈등설 등을 제기함으로써 김정일의 정권장악력과 관련하여 회의적 견해를 보여주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응답결과를 놓고 볼 때, 향후 김정일 정권 하에서 북한은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개혁·개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9>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향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매우 동의한다	14	20.3	20.3
어느 정도 동의한다	33	47.8	47.8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17	24.6	24.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	4.3	4.3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2	2.9	2.9
합 계	69	100.0	100.0

3. 북한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

통일 유형에 관한 논의에서 북한 내부 요인의 중요성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념·정치·군사·경제·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 체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비중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야간 상대적 영향력의 비중뿐만 아니라, 각 분야 내에서의 세부 영향 요인들의 비중을 파악한다.

가. 개방체제로의 변화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비중

“향후 북한체제가 점차 개방체제로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압도적 다수인 81.2%가 ‘경제분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외관계분야’가 7.2%, ‘남북관계분야’가 4.3%, ‘군사분야’ 및 ‘이념

분야가 각각 2.9%, 마지막으로 ‘정치분야가 1.4%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난을 자력생성의 폐쇄체제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지도부는 체제안정을 위해서는 경제난을 극복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경제분야에서부터 새로운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미국·일본과 수교를 못한 상황에서 외교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며, 대미·일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아 개방체제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북대화 또한 북한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분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군사·이념 분야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분야는 공고해서 북한체제가 개방체제로 전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분야로 평가되었다. 결국 북한은 자발적으로 개방체제로 전환하기보다는 당면과제인 경제난과 외교난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개방체제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 것이라 하겠다.

〈표 IV-10〉 개방체제로의 변화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 비중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념분야	2	2.9	2.9
정치분야	1	1.4	1.4
경제분야	56	81.2	81.2
군사분야	2	2.9	2.9
대외관계분야	5	7.2	7.2
남북관계분야	3	4.3	4.3
합 계	69	100.0	100.0

나. 이념 및 정치분야 요인의 비중

비록 전문가들은 이념 및 정치분야에 의해 개방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을 매우 약하게 보고 있으나, “이념 및 정치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흥미로운 대답을 보여주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체제 변화가 이념 및 정치분야에 의해서 이뤄진다면, 그 동인은 김정일의 개혁리더십, 군부의 개방·개혁수용, 개혁공산주의 리더십의 출현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김정일의 개혁리더십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북한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 약화, 이념 지배의 약화, 우익식 사회주의의 호소력 상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기대 비판, 정치엘리트간의 분열 문제가 북한체제 변화에 미칠 영향은 보통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였다. 즉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난이 곧바로 북한주민들의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거나, 우익식 사회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당·정 갈등, 당·군 갈등 등 최근 정치엘리트간의 분열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이번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데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김정일의 퇴진 또는 반김정일운동 대동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상(높다)이 29%, 중(보통이다)이 31.9%, 하(낮다)가 39.1%로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는 분포도가 골고루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김정일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연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의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한 것처럼, 김정일 퇴진 또는 반김정일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북한이 정치·이념적 요인에 의해 체제변화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유일체제 하에서 절대권력을 누리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권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1> 이념 및 정치분야 요인의 비중

단위: 명(%)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김정일의 개혁 리더십	55(79.1)	10(14.5)	4(5.8)	0	69(100.0)
군부의 개방·개혁 수용	40(58.0)	20(29.0)	9(13.0)	0	69(100.0)
개혁 공산주의 리더십의 출현	31(44.9)	28(40.6)	10(14.5)	0	69(100.0)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 약화	14(20.3)	43(62.3)	12(17.4)	0	69(100.0)
이념 지배의 약화	16(23.2)	45(65.2)	8(11.6)	0	69(100.0)
우익식 사회주의의 호소력상실	13(18.8)	42(60.9)	14(20.3)	0	69(100.0)
북한의 미래에 대한 기대비관	16(23.5)	40(58.8)	12(17.6)	1	69(100.0)
정치엘리트간의 분열	14(20.3)	39(56.5)	16(23.2)	0	69(100.0)
김정일의 퇴진/반김정일 운동 태동	20(29.0)	22(31.9)	27(39.1)	0	69(100.0)

다. 경제분야 요인의 비중

북한체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제1의 분야로 ‘경제분야’를 선택하였던 전문가들은, “경제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적 추진이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53.6%), 소상품경제(자본주의경제 초기 시장)의 확산 또한 높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47.8%)하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선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와 개성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또한 7.1 경제관

리개선조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될 경우, 향후 북한은 냉전시대의 자력갱생의 폐쇄체제를 벗어나 개방체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지방경제의 역할 증대나 주민생활 수준향상은 북한체제변화에 각각 중간정도(76.5%, 68.1%)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각각 평가되었다. 이는 '98년에 개정된 헌법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지방경제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나, 이 같은 지방경제의 역할 증대로 인해 북한사회가 개방체제로 전환되는 데에는 수령제 사회주의체제 특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생활 수준이 설령 향상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이 북한체제를 개방체제로 전환케 하는 결정요인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라 하겠다.

개인농업의 확산이나 상업활동의 확대가 북한의 개방체제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비록 중간정도의 요인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적(49.3%, 56.5%)이나, 높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의 비율도 각각(43.5%, 40.6%) 그에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특구정책의 실패나 빈부격차 형성 증대가 개방체제로 전환하는 데 미칠 가능성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특구정책의 실패는 경제특구정책이 성공되었을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동시에 빈부격차 형성 증대 문제가 개방체제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반분되어 나타났다.

〈표Ⅳ-10-2〉경제분야요인의비중

단위: 명(%)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소상공경제(초기시장)의 확산	33(47.8)	32(46.4)	4(5.8)	0	69(100.0)
개인농업의 확산	30(43.5)	34(49.3)	5(7.2)	0	69(100.0)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적 추진	37(53.6)	28(40.6)	4(5.8)	0	69(100.0)
경제특구 정책의 실패	10(14.5)	40(58.0)	19(27.5)	0	69(100.0)
지방경제의 역할 증대	7(10.3)	52(76.5)	9(13.2)	1	69(100.0)
주민생활 수준 향상	16(23.2)	47(68.1)	6(8.7)	0	69(100.0)
빈부 격차 형성·증대	17(24.6)	35(50.7)	17(24.6)	0	69(100.0)
상업 활동의 확대	28(40.6)	39(56.5)	2(2.9)	0	69(100.0)

라. 사회분야 요인의 비중

사회분야의 요인들 가운데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서는 외부정보의 유입과 확산이 가장 크게(78.3%)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유화 요구와 대규모 난민 발생 또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각 평가(50.7%, 39.1%)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난민 발생 요인은 사회분야 요인 가운데 체제변화에 영향을 가장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전문가들에 의해 동시에 평가되었다. 따라서 대남 및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사회에 외부정보가 유입·확산될 경우,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이 자유화요구로 전환되거나 대규모 난민 발생을 야기할 경우 북한은 체제변화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대규모 난민 발생은 오히려 북한체제 전복세력의 자연스러운 외부 퇴출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는 체제안정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 퇴조, 사회집단의 불만표출,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간 갈등, 탈북자의 증가와 같은 사회분야의 요인들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중간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의 공고한 통제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현상들이 쉽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본 것 같다. 다만 탈북자의 증가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나, 이 또한 북한의 체제변화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보다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요인들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가 유입·확산되어 북한주민들의 자유화 요구와 내부 투쟁이 확대될 때 북한 지도부는 체제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으나, 북한주민들이 탈북자로 북한체제를 벗어나는 것은 체제변화에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고, 대규모 난민 발생으로까지 발전한다 할 경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Ⅳ-10-3>사회분야요인의비중

단위: 명(%)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외부정보의 유입·확산	54(78.3)	15(21.7)	0(0.0)	0	69(100.0)
자유화 요구	35(50.7)	26(37.7)	8(11.6)	0	69(100.0)
집단주의 문화 퇴조	12(17.4)	46(66.7)	11(15.9)	0	69(100.0)
사회집단의 불만표출	23(33.3)	40(58.0)	6(8.7)	0	69(100.0)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 갈등	14(20.6)	45(66.2)	9(13.2)	1	69(100.0)
탈북자의 증가	12(17.6)	42(61.8)	14(20.6)	1	69(100.0)
대규모 난민 발생	27(39.1)	26(37.7)	16(23.2)	0	69(100.0)

마. 군사분야 요인의 비중

북한의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역시 군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본 문항은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문항은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개혁군부세력의 등장, 김정일과 군부간 갈등, 군사쿠테타, 군부와 민간사이의 갈등 등 5개의 세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답변한 결과표를 바탕으로 북한체제변화와 군사분야의 요인들간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4.9%에 이르고 있다. 반면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답변한 전문가는 20.3%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전문가들은 개혁군부세력의 등장이 체제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후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조직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집단은 군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하더라도 개혁군부세력의 등장은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김정일 정권의 속성상 북한에서 개혁군부세력이 실제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김정일과 군부간 갈등이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전문가들의 42%가 김정일과 군부간 갈등이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중간정도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34.8%가 적다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체제가 김정일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김정일과 군부간 갈등

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군사쿠데타가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클 것이라는 쪽과 작을 것이라는 쪽이 거의 대등하게 나뉘어진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사실상 북한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군부와 민간사이의 갈등 발생이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중간정도 및 적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여야 하는 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북한에서는 군대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와 민간의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약하면,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및 개혁군부세력의 등장이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김정일과 군부간 갈등 및 군부와 민간사이의 갈등 발생은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쿠데타가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IV-10-4> 군사분야요인의 비중

단위: 명(%)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31(44.9)	24(34.8)	14(20.3)	0	69(100.0)
개혁군부세력의 등장	31(44.9)	25(36.2)	13(18.8)	0	69(100.0)
김정일과 군부간 갈등	16(23.2)	29(42.0)	24(34.8)	0	69(100.0)
군사쿠데타	26(37.7)	18(26.1)	25(36.2)	0	69(100.0)
군부와 민간 사이의 갈등 발생	8(11.6)	35(50.7)	26(37.7)	0	69(100.0)

바. 대외관계분야 요인의 비중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대외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유럽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본 문항은 이러한 북한의 대외관계분야에서의 변화가 체제변화를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전문가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질문은 대미관계의 경색 지속, 대미·일 관계 정상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유럽 등 서방권과의 교류 확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 등 6가지 요인에 대한 세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외관계 요인이 체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6가지 요인 중 대미·일 관계 정상화를 제외한 나머지 세부요인들에 대해서 중간정도의 영향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과 미국간 관계가 북한의 체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론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미·일 관계 정상화가 북한의 체제변화에 미칠 영향을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바, 이는 북한과 미국 및 일본간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조치 및 조건들을 의식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이룩한다는 것은 미국이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북한의 경제 및 사회체제가 전반적으로 개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이 지불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사안들은 북한체제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는 것이다.

<표 IV-10-5> 대외관계분야요인의비중

단위: 명(%)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대미관계의 경색 지속	20(29.0)	30(43.5)	19(27.5)	0	69(100.0)
대미·일 관계 정상화	45(65.2)	19(27.5)	5(7.2)	0	69(100.0)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15(21.7)	47(68.1)	7(10.1)	0	69(100.0)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	7(10.1)	44(63.8)	18(26.1)	0	69(100.0)
유럽 등 서방권과의 교류 확대	11(15.9)	37(53.6)	21(30.4)	0	69(100.0)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	5(7.2)	42(60.9)	22(31.9)	0	69(100.0)

사. 남북관계분야 요인의 비중

북한의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북관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본 질문은 대남 적대의식 변화, 남한의 대북지원, 남북 인적교류 확대, 남북한 우편, 통신교류 실시, 남북한 문화교류 증대, 남한에 대한 경제의존 심화 등 6개의 세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의존 심화가 북한의 체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의존됨으로써 남한의 우월한 시장경제체제가 북한에 파급될 경우에 북한체제가 전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민의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는 남북한간 경제교류 및 협력의 확대는 북한의 체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제반 분야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남한의 대북지원이 지속된다든지 남북한간 인적교류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북한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60.3%가 중간정도의 영향력을 선택하였는바, 이는 북한의 대남관과 북한체제의 변화사이에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10-6> 남북관계분야요인의비중

단위: 명(%)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대남 적대의식 변화	19(27.9)	41(60.3)	8(11.8)	1	69(100.0)
남한의 대북지원 지속	16(23.2)	40(58.0)	13(18.8)	0	69(100.0)
남북 인적 교류 확대	26(37.7)	39(56.5)	4(5.8)	0	69(100.0)
남북한 우편, 통신 교류 실시	21(30.9)	41(60.3)	6(8.8)	1	69(100.0)
남북한 문화교류 증대	11(16.2)	50(73.5)	7(10.3)	1	69(100.0)
북한에 대한 경제의존 심화	40(58.8)	26(38.2)	2(2.9)	1	69(100.0)

4. 북한 정치체제 변화 유발사태 발생 가능성과 시기

가. 향후5년이내정치체제변화유발사태발생가능성

북한의 정치체제가 변화한다는 것은 북한정권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질문은 체제변화에 대한 질문 중에서도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질문은 민중폭동, 시민혁명, 관료주도의 개

혁정권, 군사쿠데타, 김정일의 개혁지도자로서의 변화, 조선노동당의 지배력 약화, 군부와 경제관료간의 충돌 등 7개의 세부질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민중폭동, 시민혁명, 군사쿠데타의 발발 가능성을 낮게 예측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사안들은 급격한 형태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북한체제를 공고하다고 평가하는 기본적 자세를 반영하는 설문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본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시간성, 즉 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가까운 장래에 체제자체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민중폭동, 시민혁명, 군사쿠데타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관료주도의 개혁정권, 김정일의 개혁지도자로서의 변화, 조선노동당의 지배력 약화, 군부와 경제관료간의 충돌 등 완만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발발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비록 중간정도의 점수이긴 하지만 64.7%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노동당과 정권은 일체라고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선노동당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전문가가 많다는 것은, 북한체제가 점진적으로나마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김정일의 개혁지도자로서의 변화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크다는 답변이 22.1%, 가능성이 중간정도라는 답변이 58.8%로서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변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김정일이 최근에 취한 각종 경제조치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Ⅳ-11> 향후5년 이내 정치체제 변화 유발사태 발생가능성

단위: 명(%)

	상	중	하	무응답	합계
민중(인민) 폭동	2(2.9)	13(19.1)	53(77.9)	1	69(100.0)
시민(정치적으로 각성된 인민) 혁명	1(1.5)	9(13.2)	58(85.3)	1	69(100.0)
관료주도의 개혁정권	6(8.8)	37(54.4)	25(36.8)	1	69(100.0)
군사쿠데타	3(4.5)	22(32.8)	42(62.7)	2	69(100.0)
김정일의 개혁지도자로서의 변화	15(22.1)	40(58.8)	13(19.1)	1	69(100.0)
조선노동당의 지배력 약화	3(4.4)	44(64.7)	21(30.9)	1	69(100.0)
군부와 경제관료간의 충돌	8(11.8)	41(60.3)	19(27.9)	1	69(100.0)

나. 정치체제 변화 유발사태 발생가능시기

본 문항은 바로 앞의 질문에서 제시된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그 발생 가능성의 시기를 예측하도록 하였다. 7가지의 세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3년 이내, 3~5년, 5~10년, 10~15년 등의 시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개혁지도자로서의 변화 가능성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37.5%가 3~5년 사이에 김정일이 개혁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안은 관료주도의 개혁정권, 조선노동당의 지배력 약화, 군부와 경제관료간의 충돌로서 이러한 사안이 5~10년 사이에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한 전문가

들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5년 이내의 사태 발생 가능성에 관한 앞의 문항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전문가들은 점진적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가들은 민중폭동, 시민혁명, 군사쿠데타 등 근본적 사회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의 발생 가능시기에 대해서 가장 먼 장래인 10~15년을 선택함으로써 앞의 관련 문항에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 답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분석하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근본적인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완만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Ⅳ-12> 정치체제 변화유발사태발생가능시기

단위: 명(%)

	3년내	3~5년	5~10년	10~15년	무응답	합계
민중(인민) 폭동	0	4(6.5)	20(32.3)	38(61.3)	7	69(100.0)
시민(정치적으로 각성된 인민)혁명	0	3(4.8)	11(17.5)	49(77.8)	6	69(100.0)
관료주도의 개혁정권	0	8(12.5)	34(53.1)	22(34.4)	5	69(100.0)
군사쿠데타	1(1.6)	2(3.3)	21(34.4)	37(60.7)	8	69(100.0)
김정일의 개혁지도자 로서의 변화	7(10.9)	24(37.5)	20(31.3)	13(20.3)	5	69(100.0)
조선노동당의 지배력 약화	3(4.8)	9(14.3)	34(54.0)	17(27.0)	6	69(100.0)
군부와 경제관료간의 충돌	4(6.3)	12(19.0)	32(50.8)	15(23.8)	6	69(100.0)

5. 통일 가능 시기, 통일 방식과 과제

가. 통일가능시기

통일시기를 묻는 여론조사에 대한 반응은 대개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 상황에 기반한 현실적 전망과 함께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의 두 요소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에서는 몇 년 주기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통일시기에 대한 반응이 통일문제 전문가 대상의 여론조사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점이 주목된다.

민족통일연구원의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서 “귀하는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5~10년’(37.3%), ‘20~30년’(30.8%), ‘5년 이내’(7.8%), ‘30년 이상’(9.2%) 순으로 대답했으며,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3.3%에 달했다. 1995년도 조사에서는 통일 예상시기를 ‘5년 이내’(9.5%), ‘10년 이내’(40.9%), ‘20년 이내’(26.9%), ‘30년 이내’(7.1%), ‘30년 이상’(15.5%)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4.4%는 한 세대(3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사람도 과반수를 넘는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1998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통일 예상시기는 ‘10년 이내’(28.3%), ‘20년 이내’(27.1%), ‘30년 이상’(10.6%), ‘30년 이내’(7.2%), ‘5년 이내’(4.7%) 순으로 대답하였으며, ‘모르겠다’(22.1%)는 의견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이 조사는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조기통일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즉 10년 이내(누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도 국민여론조

사에 반영된 통일 예상시기는 ‘20년 이내’(28.3%), ‘10년 이내’(27.0%), ‘5년 이내’(3.0%)로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이상(58.3%)이 향후 20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3년~95년 당시에는 북한 상황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조기통일의 기대가 높았으나 그 후 북한의 내부 사정이 점차로 안정되고 남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문제 전문가 대상의 통일 예상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는 ‘20년 이후’(40.6%), ‘15~20년 이내’(23.2%), ‘10~15년 이내’(21.7%), ‘5~10년 이내’(13.0%)로 나타난 가운데 통일시기를 ‘20년 이후’로 보는 견해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을 10년 이내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소수에 불과해 일반 국민들의 전망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통일시기를 20년 이후로 예상하는 것은 통일을 상당히 먼 미래의 장기전망 속에서 접근하는 태도로 이해된다. 이는 국민 일반의 막연한 통일에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조사 결과와는 달리 통일 전문가들의 통일환경 및 북한 체제의 내구력에 대한 분석적 이해가 반영된 통일시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예상으로 볼 수 있다.

〈표 IV-13〉 통일 가능 시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5년 이내	0	0.0	0.0
5~10년 이내	9	13.0	13.0
10~15년 이내	15	21.7	21.7
15~20년 이내	16	23.2	23.2
20년 이후	28	40.6	40.6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	1.4	1.4
합 계	69	100.0	100.0

나. 통일방식

통일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일찍부터 교류협력에 의한 점진적·합의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독일 방식의 평화적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 붕괴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이 전면 부정할 수 없는 가운데, 군사력에 의한 무력통일은 바라지 않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즉, 통일방식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대개 평화적 합의 통일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겠다.

이번 전문가 대상의 통일방식에 대한 설문은 상당히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으로 ‘중·유럽형 변화-북한체제 자멸, 남한으로 합쳐지는 통일방식’(30.4%)을 가장 높게 예상하였다.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남한 중심, 국제사회 지원협력, 북한체제 변화를 유인하는 통일방식’(29%)을 손꼽았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는 사실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더욱이 북한이 개방체제로 전환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협력과 지원이 불가피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북한의 자멸을 통한 통일’ 또는 ‘남한 주도의 통일방식’이 예상 가능한 통합모델로 상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13%)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설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견해로 비록 기타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통일프로세스에 대한 보다 치밀하고 분석적인 대안도 돋보인다.

<표 IV-14> 통일 방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한 중심, 국제사회 지원협력, 북한체제 변화유인하는 통일방식	20	29.0	29.9
중·동유럽형 변화-북한체제 자멸, 남한으로 합쳐지는 통일방식	21	30.4	31.3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	9	13.0	13.4
북한내 폭력형 내부폭발 발생하여 통일 진행	8	11.6	11.9
북한군부와 한미간 군사적 갈등 발생, 북한 붕괴 촉진	2	2.9	3.0
남북간 거래관계 확대되지만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지는 않을것임	4	5.8	6.0
기타	3	4.3	4.5
합계	67	97.1	100.0
무응답	2	2.9	
합계	69	100.0	

다. 통일을위한선행조건

국민여론조사에서 통일기반 조성 과제에 대한 설문은의 경우, 대개 ‘경제성장’, ‘정치적 민주화’, ‘빈부격차’, ‘지역감정’ 등 남한 사회 내부의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과제의 우선 순위를 묻게 된다. 그런데 전문가 대상의 통일 선행조건에 대한 설문은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우선 순위를 알아보고자 했다. 통일 선행조건으로 ‘남북 평화공존’(46.4%)을 최우선으로 꼽은 것은 어느 면에서는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의 장기전망적 시각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 문화, 학술 등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통일 선행조건으로 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한관계에서 기능주의적 통합론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남북한 상호 변화를 이끄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

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자유화’(13.0%)가 예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유화를 토대로 민주적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통일로 진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또한 통일 선행조건으로 ‘군비 축소’ 문제를 지적했으나, 이는 남북 평화공존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반응이 낮은바, 이는 인도적 사안 자체를 통일 기반 조성과 직접 연계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15> 통일을 위한 선행 조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이산가족문제 해결	1	1.4	1.5
군비 축소	8	11.6	11.8
남북한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인정	3	4.3	4.4
경제,문화,학술등비정치적인교류협력제도화	14	20.3	20.6
남북 평화공존	32	46.4	47.1
방송통신 상호개방	0	0.0	0.0
북한 사회의 자유화	9	13.0	13.2
북한 정치의 다원화	1	1.4	1.5
합 계	68	98.6	100.0
무응답	1	1.4	
합 계	69	100.0	

라. 통일이 어려울 경우의 이유

통일은 흔히 민족적 당위로 주장된다. 우리에게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의 신화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서로 다른 국가체제로 살아온 한반도의 두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 쉽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는 일은 사실 통일 장애요인을 지적하고 그것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가 자유화·다원화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14.5%)이라는 점을 최우선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남북한 이질적인 정치·경제체제의 문제와, 남북한 각각의 현상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통일거부 요인에 대해 같은 비율(13.0%)의 반응을 보였다. 다음으로 통일환경 문제로 주변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장차이(11.6%)를 통일 억제요인으로 들었으며,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합의 불가능성(10.1%)도 무시할 수 없는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전문가들은 통일비용 문제는 통일 장애요인으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독일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통일비용과 통일후유증 문제 등이 우리 사회에 그릇된 형태로 소개됨으로써 우리 국민들 사이엔 통일비용에 대한 지나친 부담의식이 통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통일비용 문제는 결코 통일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요컨대 통일의 장애 요인은 설문 항목간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북한체제의 내부 요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6> 통일이 어려운 경우의 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남북의 정치·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	9	13.0	19.6
북한체제가 자유화·다원화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	10	14.5	21.7
통일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남한국민이 바라지 않을것임	3	4.3	6.5
주변국가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	8	11.6	17.4
남북한 각각의 기득권층이 기존형태 유지 원하기 때문	9	13.0	19.6
남북한 정치지도자들간 합의가 어렵기 때문	7	10.1	15.2
합 계	46	66.7	100.0
무응답	23	33.3	
합 계	69	100.0	

마. 평화통일을위한역점과제

통일의 대원칙은 평화적인 방법과 과정에 의한 평화통일에 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남북한 긴장상태의 해소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상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적 통일상황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 순위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교류를 비롯하여 정치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형태에 대해, '경제교류협력'(60.9%)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평화의 실천적인 접근으로 '군비통제'(20.3%)를 강조하였다. 문화교류, 방송교류, 시민단체교류 등 다양한 교류 형태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종교교류와 정치협상에 대한 반응은 전무한 점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사회이므로 남북한 종교교류 자체는 비현실적이라

는 반응으로 이해된다.

평화통일을 위한 역점 분야는 대개 인적·물적 교류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북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군비경쟁을 환기시키는 입장도 무시할 수 없으나 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평화적 통일상황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정치군사적 접근보다는 비정치적·비군사적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7> 평화 통일을 위한 역점 과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문화교류	4	5.8	6.0
경제교류협력	42	60.9	62.7
종교교류	0	0.0	0.0
시민단체교류	2	2.9	3.0
군비통제	14	20.3	20.9
군비경쟁(대북군사력 우위 확보)	2	2.9	3.0
방송교류	3	4.3	4.5
정치협상	0	0.0	0.0
합	계	67	97.1
무응답		2	2.9
합	계	69	100.0

6. 한반도 통일과 국제 환경

가. 한반도통일에가장우호적인주변국가

한반도 통일과정은 국제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는 이해관계의 변화 여부가 통일 상황의 전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 “주변 4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줄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주변 4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한 응답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를 선택한 전문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전체 응답자 중의 44.9%가 미국이라고 대답한 반면, 응답자의 39.1%는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약 6%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반반씩 엇갈리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는 것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관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이처럼 엇갈린다면 그와 관련된 유사상황에 대한 분석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령, 최근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사이에 팽팽한 대립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우호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한 사람이 5.8%와 7.2%를 차지하여 합하면 13%나 된다는 것은 아마도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Ⅳ-18>한반도통일에가장우호적인주변국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국	31	44.9	45.6
일본	1	1.4	1.5
중국	4	5.8	5.9
러시아	5	7.2	7.4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	27	39.1	39.7
합	계	68	98.6
무응답	1	1.4	
합	계	69	100.0

나. 통일을 위해 협력을 구해야 할 국가

“주변 4국 중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의 상황을 초래하기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85.5%가 미국이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4.5%가 중국이라고 응답하였다. 일본이나 러시아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문 자체가 한반도 주변 4국 중에서 가장 주요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본과 러시아는 제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 추진과정에서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협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통일을 위하여 협력을 구해야 할 나라로서 미국을 지목한 것은 예상되는 대로다. 반세기의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미국이 동북아지역과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행하고 있는 역할이

나 역학관계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중국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의 비율이 14.5%밖에 안되지만 동북아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질문과 관련하여 해석상에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의 상황을 초래하기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야 할 나라로서 미국을 꼽은 것은 주변 4국 중에서 미국의 상대적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줄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앞의 질문에 대하여 약 40%의 전문가가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고 한 응답과 연계하여 볼 때, 향후 통일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야 할 나라로서 미국을 지목한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Ⅳ-19> 통일을 위해 협력을 구해야 할 국가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미 국	59	85.5	85.5
일 본	0	0.0	0.0
중 국	10	14.5	14.5
러시아	0	0.0	0.0
합 계	69	100.0	100.0

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대미·일 관계 변화는 한반도 통일 상황의 환경 조건과 관련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현 상황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변수이다.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5.5%가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공존체제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개발 차관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이 촉진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지 못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폐쇄주의적 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폐쇄주의적 정책을 지속하는 한 스탈린주의적 정치체제는 계속될 것이며,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여 경제난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데올로기적인 사회통제는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8.5%는 통일에 불리하거나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일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가까워져서 교차수교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분단의 질서가 영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수교 이후 전개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북한의 분단을 영속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더 클지 작을지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그런데 통일전문가 집단의 응답자 대부분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Ⅳ-20〉북한의대미·일관계개선이통일에미치는영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유리	59	85.5	85.5
불리	1	1.4	1.4
통일 지연	5	7.2	7.2
영향 없음	2	2.9	2.9
모르겠다	2	2.9	2.9
합	계	69	100.0

라. 향후5년의동북아정세가통일에미치는영향

향후 5년 정도의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6.7%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하였다.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5%로서 소수에 그친다. 이것은 통일 전문가의 대다수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질문지가 조사한 시점이 최근의 제2차 북한 핵문제가 제기되기 전임을 감안한다면 그 이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동북아의 역학관계에 대한 상황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북한과 미국일 것이다.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비롯하여 신의주 행정 특구, 개성공단 특구, 금강산관광 특구 등을 개방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통일환경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이후 지난 10여 년간 북한이 보인 행태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로 특징지어질 만큼 폐쇄주의적 구태를 지속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최근 북한의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협력 관계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국가이익에 따른 관계 변화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도 점차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지역에서 탈냉전의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북아 국제정세가 우리의 통일 환경에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전개된다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표Ⅳ-21> 향후5년의동북아정세가통일에미치는영향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매우 긍정적 영향	2	2.9	2.9
다소 긍정적 영향	44	63.8	64.7
그저그렇다	12	17.4	17.6
다소 부정적 영향	8	11.6	11.8
매우 부정적 영향	2	2.9	2.9
합	계	68	98.6
무응답	1	1.4	
합	계	69	100.0

7. 통일기반 조성 과제와 통일에 대한 견해

가. 통일기반조성을위한과제

통일 상황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요인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 이미 이론적 논의에서 지적되었다. 북한 요인이나 국제 환경 요인이 통일 상황을 가져오더라도 국내적 기반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의 난관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일 상황 조성과 관련한 국내적 준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귀하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경제성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2.29%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정치적 민주화라고 응답한 사람이 26.1%, 지역감정 해소라고 응답한 사람이 11.6%이며, 빈부격차 해소라고 응답한 사람은 8.7%에 그쳤다.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그 사실을 목격하였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남한이 IMF 구제금융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남한의 경제력으로는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매우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으며, 북한의 경제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매우 구조적인 체제적 요인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소요될 것임은 분명하다.

통일전문가들의 진단에서 밝혀진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독일이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서독의 경제적 기적 때문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독일 통일은 서독의 마르크화로 동독을 산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대외정책에 지나치게 국력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등의 통일을 빌미로 한 예산

유출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정책의 우선 순위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IV-22>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과제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정치적 민주화	18	26.1	26.1
경제성장	36	52.2	52.2
지역감정	8	11.6	11.6
빈부격차	6	8.7	8.7
노사문제	0	0.0	0.0
세대갈등	1	1.4	1.4
합	69	100.0	100.0

나. 통일에 대한 견해

통일은 분단국가가 진정한 하나의 ‘민족국가’로 탄생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국가 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에 있어서 통일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통하여 향후 통일 상황을 조성하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점진적인 통일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부분이 전문가 집단과 일반 국민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의 소원

은 통일'이라는 감성적 판단에 따라 통일 지상주의적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통일 이후의 문제점과 후유증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간 자유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된다면 제도적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3.2%를 차지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통일이 수반하는 많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문제점과 갈등이 많은 통일보다는 제도적인 통일은 되지 않은 채 사실상의 통일의 상황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응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이러한 통일관은 현재의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인 판단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당장의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IV-23>통일에대한견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당장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함	0	0.0	0.0
점진적인 여건 성숙이 중요함	53	76.8	76.8
남북간 자유로운 거래관계 형성된다면 제도적통일은 불필요	16	23.2	23.2
합 계	69	100.0	100.0

참고문헌

1. 영문

CSIS Working Group Report. *A Bluepr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Washington, D.C.: CSIS, August 2002.

2. 국문

삼성경제연구소 편. 『남북한 통일시나리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최평길. “남북한 관계발전 시나리오 2000 - 21세기를 준비하는 남북한의 통합 전망.” 한국정치학회 편.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제4회 한국정치학회 세계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4.

통일연구원 편.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각년도.

통일연구원 편. 『통일연구원 10년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부 록 1>

통일 상황 예측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

최근의 북한 상황과 향후 북한 상황의 전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 귀하는 2002.7.1 이후의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 특구 계획 등 북한의 최근 조치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①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이며 전술적인 조치이다.
- ②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③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틀 속에서의 경제정책의 변화이다.
- ④ 북한이 의식적으로 중국식 개방·개혁정책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⑤ 북한은 불가피하게 경제개방과 개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조치들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문2.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 특구 계획 등 북한 당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은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남한의 지원 및 남북협력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 ② 남한의 지원과 남북협력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 ③ 남한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지원으로 성공할 수 있다.
- ④ 독자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우나, 외부의 지원이 절대적인

필수조건은 아니다.

⑤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문3. “향후 5년 이내 북한은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생필품, 소비품 가격의 시장 가격으로의 전환과 같은 초기 수준의 자본주의 경제 작동 양식을 도입하여 정착시킬 것이다.” 라는 예측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② 가능성이 다소 높다.
- ③ 가능성이 조금 있다.
- ④ 가능성이 다소 낮다.
- 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4.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들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방식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평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 ③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모르겠다.

문5.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개방(개혁)조치이며 정치적으로도 체제의 유연성을 가져오고 개방으로의 정책 선택을 가져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② 가능성이 다소 높다.
- ③ 가능성이 조금 있다.
- ④ 가능성이 다소 낮다.
- 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문6.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 주민의 사고 체계에 변화를 가져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욕구 불만을 표출시키게 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정치체제의 변화 현상이 촉발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향후 몇 년 내에 보다 적실성(適實性) 있는 주장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3년 이내
- ② 3년 이후 5년 이내
- ③ 5년 이후 10년 이내
- ④ 10년 이후 15년 이내
- ⑤ 15년 이후

문7. 1998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재추대 이후 취하고 있는 일련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과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의도적인 개방·개혁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상당히 그렇다.
- ③ 별로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⑤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문8.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김일성의 그늘에서 벗어나 개혁공산 주의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 ③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문9.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자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최고권력 자로서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 ② 어느 정도 동의한다.
- ③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문10. 향후 북한체제가 점차 개방체제로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가져오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념분야
- ② 정치분야
- ③ 경제분야
- ④ 사회분야
- ⑤ 군사분야
- ⑥ 대외관계 분야

⑦ 남북관계분야

문10-1. 이념 및 정치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김정일의 개혁 리더십(상/ 중/ 하)
- ② 군부의 개방·개혁 수용(상/ 중/ 하)
- ③ 개혁 공산주의 리더십의 출현(상/ 중/ 하)
- ④ 김정일 정권에 대한 충성심 약화(상/ 중/ 하)
- ⑤ 이념 지배의 약화(상/ 중/ 하)
- ⑥ 우리식 사회주의의 호소력 상실(상/ 중/ 하)
- ⑦ 북한의 미래에 대한 기대 비관(상/ 중/ 하)
- ⑧ 정치엘리트간의 분열(상/ 중/ 하)
- ⑨ 김정일의 퇴진/ 반김정일운동 태동(상/ 중/ 하)

문10-2. 경제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소상공경제(자본주의경제의 초기 시장)의 확산 (상/ 중/ 하)
- ② 개인농업의 확산(상/ 중/ 하)
- ③ 경제특구 정책의 성공적 추진(상/ 중/ 하)
- ④ 경제특구 정책의 실패(상/ 중/ 하)
- ⑤ 지방경제의 역할 증대(상/ 중/ 하)
- ⑥ 주민생활 수준 향상(상/ 중/ 하)
- ⑦ 빈부 격차 형성·증대(상/ 중/ 하)
- ⑧ 상업 활동의 확대(상/ 중/ 하)

문10-3. 사회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외부정보의 유입·확산(상/ 중/ 하)
- ② 자유화 요구(상/ 중/ 하)
- ③ 집단주의 문화 퇴조(상/ 중/ 하)
- ④ 사회집단의 불만표출(상/ 중/ 하)
- ⑤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 갈등(상/ 중/ 하)
- ⑥ 탈북자의 증가(상/ 중/ 하)
- ⑦ 대규모 난민 발생(상/ 중/ 하)

문10-4. 군사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상/ 중/ 하)
- ② 개혁군부세력의 등장(상/ 중/ 하)
- ③ 김정일과 군부간 갈등(상/ 중/ 하)
- ④ 군사쿠데타(상/ 중/ 하)
- ⑤ 군부와 민간 사이의 갈등 발생(상/ 중/ 하)

문10-5. 대외관계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대미관계의 경색 지속(상/ 중/ 하)
- ② 대미·일 관계 정상화(상/ 중/ 하)
- ③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사회주의 형제국가 관계 쇠퇴)(상/ 중

/하)

- ④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형성(상/ 중/ 하)
- ⑤ 유럽 등 서방권과의 교류 확대(상/ 중/ 하)
- ⑥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상/ 중/ 하)

문10-6. 남북관계분야의 다음 요인들이 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각 항목을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주십시오.)

- ① 대남 적대의식 변화(상/ 중/ 하)
- ② 남한의 대북 지원(식량, 비료 등) 지속(상/ 중/ 하)
- ③ 남북 인적 교류 확대(상/ 중/ 하)
- ④ 남북한 우편, 통신 교류 실시(상/ 중/ 하)
- ⑤ 남북한 문화교류 증대(상/ 중/ 하)
- ⑥ 남한에 대한 경제의존 심화(상/ 중/ 하)

문11. 다음은 향후 5년 이내에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사태들을 상정해본 것입니다. 귀하는 각 사태의 발생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민중(인민) 폭동(상/ 중/ 하)
- ② 시민(정치적으로 각성된 인민)혁명(상/ 중/ 하)
- ③ 관료주도의 개혁정권(상/ 중/ 하)
- ④ 군사쿠데타(상/ 중/ 하)
- ⑤ 김정일의 개혁지도자로서의 변화(상/ 중/ 하)
- ⑥ 조선노동당의 지배력 약화(상/ 중/ 하)
- ⑦ 군부와 경제관료간의 충돌(상/ 중/ 하)

문12.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의 사태들이 향후 언제쯤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민중(인민) 폭동(3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 ② 시민(정치적으로 각성된 인민) 혁명(3년 이내/ 3~5년 이내 /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 ③ 관료주도의 개혁정권(3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 ④ 군사쿠데타(3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 ⑤ 김정일의 개혁지도자로서의 변화(3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 ⑥ 조선노동당의 지배력 약화(3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 ⑦ 군부와 경제관료간의 충돌(3년 이내/ 3~5년 이내/ 5~10년 이내/ 10~15년 이내)

통일 상황으로의 전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13. 귀하는 지금부터 몇 년 이내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이내
- ② 5년 이후 10년 이내
- ③ 10년 이후 15년 이내
- ④ 15년 이후 20년 이내
- ⑤ 20년 이후
- ⑥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14. 통일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어떤 방식의 통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이 중심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인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② 북한이 도입·시행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체제의 변화를 촉진함으로써 점차 사회주의체제가 변질되는 중·동유럽형 변화가 나타나 북한체제가 자멸하여 남한 체제로 합쳐지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③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이 성공하여 체제안정을 이루지만 개혁공산주의로 변화되고, 따라서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어 합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④ 북한의 경제회복 전략이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주민의 불만이 체제 저항으로 집단화됨으로써 폭력형 내부 폭발이 발생함으로써 통일이 진행될 것이다.

- ⑤ 북한의 변화과정에서 군부가 더욱 득세하고, 이에 따라 북한 군부와 한미간에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는 충돌이 발생한 결과로 북한의 붕괴가 촉진되는 통일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 ⑥ 남북간 거래관계가 확대는 되지만 하나의 국가로 통일은 되지 않을 것이다.
- ⑦ 위의 사항 중 선택 사항이 없을 경우 생각하고 계시는 통일 의 방식을 기술해 주십시오.
()

문15. 귀하는 통일을 위한 선행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산가족문제 해결
- ② 군비 축소
- ③ 남북한의 서로 다른 정치체제 인정
- ④ 경제, 문화, 학술 등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의 제도화
- ⑤ 남북 평화공존
- ⑥ 방송통신 상호개방
- ⑦ 북한 사회의 자유화
- ⑧ 북한 정치의 다원화

문16.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남북의 정치·경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북한체제가 자유화·다원화로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 ③ 통일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남한 국민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 ④ 주변 국가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하기 어려

울 것이다.

- ⑤ 남북한의 사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⑥ 남북한 각각의 기득권층이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 ⑦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간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문17. 평화적인 통일 상황을 초래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교류
- ② 경제교류협력
- ③ 종교교류
- ④ 시민단체교류
- ⑤ 군비통제
- ⑥ 군비경쟁(대북 군사력 우위 확보)
- ⑦ 방송교류
- ⑧ 정치협상

문18. 귀하는 주변 4국 중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우호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해줄 국가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 ② 일본
- ③ 중국
- ④ 러시아
- ⑤ 통일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은 없다

문19. 귀하는 주변 4국 중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일의 상황을 초래하기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을 구해야 할 나라는 어느 나

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 ② 일본
- ③ 중국
- ④ 러시아

문20. 귀하는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치적 민주화
- ② 경제성장
- ③ 지역감정
- ④ 빈부격차
- ⑤ 노사문제
- ⑥ 세대갈등
- ⑦ 모르겠다

문21. 귀하는 남북한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당장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으로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 ③ 남북간에 비교적 자유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고 인적 이동이 허용된다면 제도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문22. 귀하는 향후 5년 정도의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②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③ 그저 그럴 것이다
- ④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⑤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23. 귀하는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리
- ② 불리
- ③ 한반도 통일지연
- ④ 영향 없음
- ⑤ 모르겠다

문24. 본 설문조사를 토대로 통일 상황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하여 Delphi방법으로 2차에 걸친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 예측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다음은 자료의 분석을 위한 사항들입니다.

성 명:
소 속: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
학 위: 학사/ 석사/ 박사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구경력: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주 소: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부 록 2>

통일의 유형(Unification Outcomes)

많은 학자, 정책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이 가능한 통일의 시나리오를 추정해왔다. 그러나 통일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1) 평화적 통합(By Peaceful Integration)에 의한 통일
- (2) 체제붕괴/흡수(By Default)에 의한 통일
- (3) 전쟁(By War)에 의한 통일

통일 유형 1: 평화적 통합

평화적 통합이란 “은건한” 또는 보다 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의 유형을 일컫는다. 1990년대 초반 처음 사용된 이 유형은 종종 “연착륙” 통일 시나리오로 불리기도 했다.

이 유형의 통일을 정의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경착륙”보다 덜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통일로 종종 정의되었다. 이 유형의 통일의 구성 요소를 묘사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유형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 먼저 남북한과 주변 4강(미, 일, 중, 러)에 의한 현상유지 수용
- 2 + 2 모델을 따른 상호 외교적 승인
- 공식적인 평화 조약
- 상당한 기간의 평화공존 (평화적 통합의 핵심 요소)
- 제한적인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동반한 경제 전선에서의 남북간 활발한 상호작용 (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이

오늘날보다 높음)

- 과거 한국의 통일 방안에 명백히 나타난 “1국가, 2체제, 2정부” 노선에 따른 점진적인 구조적 변화
- 최종적으로 통일 완성

주요 논점

첫째, 남북간 평화공존에서 통일로의 이행은 정치적 통합이나 사회적 교류가 아니라, 경제가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역, 투자, 합작 기업 등은 개인간 기능적 상호작용, 노동의 이동, 법률 체제의 상호 조정, 그리고 그 밖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매개 수단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다시 정치적·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이 유형의 통일 시나리오에 있어서 불확실하게 남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한반도 미군 주둔 문제이다. 이 문제를 그들의 모델에서 다루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공존과 통합의 과정의 부분으로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 지속을 마지못해 묵인하거나 (따라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전제조건을 철회), 남한이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는 가정이다.

셋째, 이러한 통일 시나리오를 유발하는 계기와 최종 상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일부는 현상유지의 공식적 인정과 평화 정착이 달성되면 경제 통합으로 가는 평화공존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은 상호 합의와 조화로운 방식으로 두 체제가 점진적이고 진화적으로 결합하는 최종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고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이다. 좀더 그럴 듯한 결과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평화공존의 시간 선상 어딘가 에서 통일

을 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들은 그 이전의 통합 수준의 결과로 인해 최소화된다. 이 유형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평화적 통합 시나리오는 긴 시간의 공존과 통합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다.

미국의 역할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통일과정이 진행된다면 미국은 중요하면서 유용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수행되는 임무와 통일한국과 지역 사이에서 행해질 임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서, 미국은 두 한국 사이의 공존 과정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조율하는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 아래서의 특수한 과제는 어려운 안보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대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즉, 신뢰구축 방안 관리, 평화조약에 근거한 상호 전력 감축 모니터링 등.

한반도를 벗어나서, 미국은 한반도에 새로운 현상유지 상태가 나타남으로써 이 지역 국가들간에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임무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같은 미국의 역할 제안은 한국인들이 미군 주둔의 지속을 환영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했듯이, 사실상 한국인들은 이 시나리오에서 미국의 두드러진 역할 수행을 반기지 않을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연착륙에 대한 높은 희망과 통일과정에서의 강대국간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희망은 미국을 몰아내고 중립을 선언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만약 북한이 주한미군을 진정한 평화 통일의 핵심적인 장애물로 계속

주장한다면 더욱 있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통일 유형 2: 체제붕괴/흡수

“체제붕괴/흡수”에 의한 통일은 덜 온건한 통일의 결과를 의미한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실패하고 흡수의 방식을 통해 갑작스럽게 통일에 이르게 되는 시나리오이다. “경착륙”은 김영삼 정부 하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견해는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한간 경제 발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동안 특히 유행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이후,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가 회생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소련의 붕괴, 한국의 중국 및 러시아/소련과의 수교, 북한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기근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상정하게 하였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른 요인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시나리오에 공통된 몇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체제붕괴를 촉발하는 계기적 사건은 어떠한 사건의 준비나 경고 없이 갑작스런 통일 과정을 가져올 것이다.
- 북한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질서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국경 유지와 감시, 난민 처리, 통제된 노동력 이동 등과 같은 대량 인구 이동 조절이 개입/통일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우선적인 과도조치로 다루어져야 한다.
- 정치, 사회, 경제 통합 이슈는 전쟁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에서보다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붕괴가 갑작

스럽고 통제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논점

첫째, 이 시나리오에서는 통일에 이르게 되는 계기적 사건 혹은 체제 붕괴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합의가 거의 부재하다. 그러한 촉발 사건은 두 가지의 양극단 사이의 어디에선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개방·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중소요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초기 개혁 조치가 기대 상승을 일으켜 엘리트 내부 갈등과 같은 위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형태의 촉발요인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북한 붕괴의 경우 필요한 개입의 형태에 대한 논의는 공개된 자료로서가 아니라 기밀로 연구되어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질문거리가 있다. 북한 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개입이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합동 군사 작전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남한이 주된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남한은 북한 내에서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는 데에 미국의 동의 내지는 국제적 동의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UN 산하 다국적군이 그러한 개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인가?

셋째, 이 시나리오에서는 정치적, 사회경제적 통합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하나는, 이 시나리오가 전쟁과 같은 유혈 시나리오에서 상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국가에 개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주권을 빼앗을 수 없으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이다. 임시 지역 정부가 지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 개입하여 관리하는 정책

(예: 화폐전환, 참정권 부여, 국경관리 등)이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방식으로 토착민들이 거부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역할

이 시나리오 하에서 미국은 단기적 및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시나리오 상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한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북한의 핵, 생화학, 미사일 등의 군사 시설을 파악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그 외에, 미국은 한국과 협조하여 북한을 재건하기 위한 개입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북한 정권의 실패가 동북아 지역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일본, 중국 및 그 밖의 지역 국가들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개입 초기의 역할이 종료된 이후, 미국의 장기적 역할은 평화적 통합 시나리오의 것과 유사하다. 통일이라는 기념비적 과업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이 주는 혜택과 지원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으로부터 한국이 얻는 이익은 어려운 통일과정이 주한 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미칠 비용과 압력에 의해서 상당한 정도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통일 비용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미군 주둔 유지에 드는 추가 비용을 쟁길 여력이 없을 것이다. 험난한 통일과정에 환멸을 느끼고 좌절한 한국민은 미국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미군기지화 시설에 대한 저항과 테러 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미군의 주둔과 지원이 붕괴에 의한 통일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환영받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고 한국 스스로가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면 미군에 대한 더 부정적인 감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통일 유형 3: 전쟁

전쟁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결과이다. 즉 전쟁의 종결로써 생긴 부산물로서 통일에 이르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컨대, 이 시나리오의 촉발사건은 1950년 6·25전쟁과 유사한 북한의 두 번째 침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항구와 미국의 병참기지에 대한 화학무기 장착, 미사일 공격은 병력 증강을 지연시킬 것이고 북한군이 서울을 장악하고 그들이 공급 라인을 재정비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노동 미사일 또는 대포동 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전쟁계기의 발생가능성은 한미 양국의 믿을만하고 강건한 전쟁억지력에 의해 누그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의한 통일은 여전히 가능성이 다분하다. 역사가 증명하듯, 전쟁은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우연한 사고나 오판으로 인해 종종 발생한다. 만약 평양의 침략이 억제될 경우, 좀더 발생 가능한 전쟁 시나리오는 제한적인 북한의 폭력행위와 극단전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나타날 것이다.

전쟁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한다.

- 한국인(남북한), 미국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상자 발생. 서울과 다른 주요 도시의 대규모 산업 시설 황폐화. 북한은 몰락.
- 남한에는 잠재적으로 화학무기 환경이 발생할 가능성.
- 미국 및 일본의 개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

격으로 대량 파괴.

- 남한 혹은 미국이 전쟁 이후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관리(북한체제 붕괴에 의한 통일의 유형에서처럼 인도주의적 개입이 아님).

주요 논점

전쟁 종료에 의한 통일 시나리오에서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만약 북한지역이 전쟁 이후 점령군에 의해 관리되어진다면 통합/흡수의 문제가 두 번째 유형에 비해 덜 즉각적인 문제로서 대두된다는 점이다. 전쟁에 의한 통일이 비록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급 계획으로서 가장 준비해야할 통일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그 계획 작성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반격 으로서는 한계를 갖고있다. 전쟁 이후 군대의 점령이나 통일 문제에 대한 윤곽과 세부사항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과의 문제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는 중국이 38선 이북에서 전쟁이 수행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전쟁 으로부터 중국 자신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중국이 다른 행위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쟁기간동안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완충 지대를 만든다면, 그러한 지역은 중국 땅이 아닌 아마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넌 한국 땅에 세워질 것이다. 미국과 한국으로서는 전쟁기간동안 중국군의 한반도 주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미국의 역할

이러한 통일 시나리오의 경우에, 통일의 시기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게 될 것이다. 전쟁 종결 작전 때문에 미국이 북한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데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그리고 첫 번째)와 비교해봤을 때, 미국은 전후 북한지역 관리에 있어서 많은 부분 실제로 가장 큰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능력의 배치와 안전화가 우선시 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역할과 그 논리는 두 번째 시나리오와 유사할 것이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을 연장하고 안보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한국이 용인하는 수준은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보다는 높을 것이다.